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 보도자료

문의	이승환 선임비서관 (이용우 국회의원실)	연락처	010-8784-1878 (lywchosim@naver.com)
----	--------------------------	-----	--

민주 “KTX-SRT 운영사 통합 추진” … 민주노총 산별연맹과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22일(목) 오전 전국철도노동조합 ·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와 각각 정책협약식 개최
- 철도 · 지하철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 … 교통기본법 제정 위해 노력
- 고속철도 운영사 통합 추진, 상시지속 ·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 노력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 선대위) 산하 노동본부는 22일(목) 10시 30분과 11시30분 각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궤도협의회) 및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함께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에서 공식 대선방침이 결정되지 못한 가운데, 산별연맹 단위에서는 민주당과 정책협약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날 두 협약식에는 김태균 상임의장 겸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등 궤도협의회 간부진과 강철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진이 각각 참석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노동본부 본부장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본부 부분부장인 이용우 국회의원, 노동본부 노동희망실천단 신동호 단장이 모두 참석했

다.

민주당 선대위는 궤도협의회 정책협약에서 ▲교통기본법 제정, ▲KTX-SRT 운영 통합 등 민간도시철도의 공공성 강화, ▲필수유지서비스 의무제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정책협약에도 ▲고속철도 운영사 통합,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필수 안전인력 기준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훈 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본부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분할된 고속철도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새로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호 노동본부 노동희망실천단 단장도 “오늘 협약의 내용은 노동자들이 철도·지하철 공공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 왔던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민주당과 철도노동자들이 계속 소통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사회를 맡은 이용우 의원도 “민주당이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협약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협약서에 담았다. 이 점을 중요하게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끝)

[별첨 1] 민주당 선대위 - 철도노조 정책협약서 원문

[별첨 2] 민주당 선대위 - 궤도협의회 정책협약서 원문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 전국철도노동조합

탄소 중립 실현, 철도통합 및 총인건비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서

대한민국 철도는 공공교통의 중추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삶의 향상에 있어 핵심적 사회기반시설이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 과제에 상호 공감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노력한다.

- (고속철도 통합)**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 이동권 확대를 위해 고속철도 운영사 통합을 추진한다.
- (탄소 중립 실현)** 탄소 중립을 위한 교통부문 감축 목표 달성 및 공공교통의 확대를 위해 철도 중심 교통전환(모달시프트)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 (민주당 중재계승)**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도출된 총인건비 재원 잠식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4. (공공기관 제도개선) 공공기관의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정 인력 충원 및 노동조건 개선을 추진하고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외주화 방지, 적정 임금 보장 등의 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철도안전)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 안전인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 부족으로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인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철도노선 확장 및 신설 과정에서 안전성과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주체, 운영기관, 현장 노동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철도노조는 향후 정부의 철도교통 정책 수립 및 입법 과정에서 그 정신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상호 노력한다. 향후 실질적 이행 단계에서도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책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5. 5. 22.



위원장 **강 철**



제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본부장 **김영훈**

지속가능 공공교통체계 구축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외 13개 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는 대중교통의 공공교통 대전환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철도·지하철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한다.

- 다 음 -

1. (평등한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 국민이 평등하고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
2. (철도, 지하철 중심의 공공교통 확충) 기후위기 대응에 효율적 운송수단인 철도·지하철 중심의 공공교통을 확충하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3. (통합 공공교통체계 구축) 이윤 중심의 분절화된 구조를 벗어나 KTX-SRT 고속철도 운영통합 및 민간도시철도의 공공성 강화, 민자사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억제 장치 마련 등 ‘통합 광역 통합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4. (지속가능한 재정조달과 투자구조 확립)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및 지속가능한 공공교통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모색한다.

5. (공공교통 계획과 운영에 노동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교통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6. (철도, 도시철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통제와 처벌이 아닌 원인규명과 안전대책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는 필수유지서비스의 무제, 임금 가이드라인 등 각종 정부 지침 및 권고 방식의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한다.

2025. 5. 22.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
- 광주교통공사노동조합
-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
- 공항철도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메트로9호선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
-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 공공운수노조 신분당선지부

상임의장 김태균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본부장 김영훈

